



장 현 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지난 세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경제성장이었다. 고도성장기 국가의 모든 역량은 경제성장을 위해 동원되었고, 모든 조직과 시스템도 경제성장에 맞게 구축되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택가능한 대안이 있었겠지만, 당시 국내시장의 규모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실업상태의 노동인구가 많았던 우리로서는 수출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국가 전체의 자원을 총 동원하여 수출에 매진하는, 이른바 '총력수출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에너지산업도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즉 에너지산업도 고도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체

새로운 천년을 앞둔

에너지산업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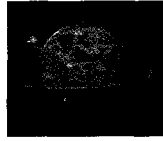
제로 조직되고 운영되었다.

60년대에 합판, 가발, 신발류 등 노동집약형 제품에 수출특화를 하면서 우리 나라는 고속성장의 시동을 걸었다. 7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른바 중후장대형(重厚壯大型) 중화학산업으로 급격히 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였는데, 철강·시멘트 등이 중화학공업은 경공업에 비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관계로 에너지의 원활한 공급이 이들 산업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수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장메카니즘보다는 정부주도의 수급 계획에 의존하였는데, 이는 당시 우리나라의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많았다. 전력이나 천연가스, 석유 등은 에너지의 공급 및 소비를 위해 대단위의 기반시설이 요구되는데, 경제개발 초기 이러한 대단위 에너지 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자본동원이 여의치 않았던 우리로서는 결국 정부가 해외차관, 재정지원 및 채무보증 등을 주도함으로써 해외자본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한전이나 가스공사

와 같은 대규모 공기업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계획을 마련, 이를 바탕으로 기반시설을 증설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주도·독점 공기업 중심형 에너지산업구조는 80년대부터 가시화되기 시작한 개방화·자율화의 추세에 따라 큰 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의 결과 에너지산업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영화와 규제완화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에너지부문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정부의 역할이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부의 역할전환이 더 혁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산업의 가격과 수요공급, 산업구조 등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해 왔지만 이제 이러한 조절기능을 점진적으로 시장에 이양하고 있다.

에너지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다른 요인은 바로 '환경'이다. 각국이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국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다자간



협상을 시작한 것은 90년대 초반부터이며 이제 환경이 21세기의 話頭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에너지 자원의 생산, 전환, 소비는 환경오염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 중에서도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국제적 환경규제의 핵심적 사안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의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절대적인 소비량도 세계적인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서 국제적 규제가 가시화될 경우 국가적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는 비용이 아니지만 국제적 협약에 의해 실제 비용화될 경우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우리가 수출의 대부분을 의존해야 하는 선진국일수록 지구온난화문제에 적극적인 점을 감안할 때, 우리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의 효율적 소비, 에너지 저소비형 제품의 생산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물론 기후변화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은 다자간 협상이라는 특성상 쉽게 결론이 나거나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렵겠지만, 설령 국제적 협상이 어떠한 구체적 결과를 낳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선진국들은 자국의 높은 환경기술력과 대응체제를 이용, 환경에 대한 규제를 독자

적으로 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환경친화적 생산 및 소비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서둘러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감안하면, 21세기 우리 나라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는 바로 에너지

경문제에 대한 정부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이른바 외부경제인 환경문제는 시장기능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정책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일관성없는 과세체계를 탄소/열량세 중심의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에너지 소비합리화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산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시장기능의 회복은 곧 개방과 경쟁을 의미하며, 수요관리형 정책은 곧 에너지산업의 효율성 증대 요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이 정부의 지원아래 생산만 하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대는 지났다. 어느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낮은 가격에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에너지산업에서의 M&A 열풍은 바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에너지산업도 이제 시장에서의 냉혹한 생존경쟁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제 새로운 시대는 개막되었다. 얼마나 선구적으로 새 시대를 선도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산업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어느 기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낮은 가격에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는 좌우된다.**

저소비·고부가가치형 사회경제구조를 이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규제하에 놓여 있던 에너지 가격의 결정을 시장기능에 맡겨 에너지의 소비를 합리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수요관리 중심으로 재편하여 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절약과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

한편 에너지의 시장기능이 회복되면 시장에서는 해결되지 않는 환